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59-12 3층 T.02-778-4001. F.02-778-4006 pssp@jinbo.net http://www.pssp.org

2014년 5월 1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2014년 4월 26일 ~ 2014년 5월 9일

주요 키워드

1. **의료영리화** : 차병원그룹, 국내 첫 '의산(醫産)복합체' 출현 예고? (4. 29)
2. **신의료기술** : 복지부, 신의료기기 시장진입 최대 12개월 단축 기술평가 대상 대폭 축소 (5. 1)
3. **산재** : 야근 잦은 근로자 암에 걸리면 산재 인정될까? 인정범위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벽 ... 인정기준 사회적 합의 필요 (4. 29)/“하루 13시간 이상 노동, 뇌출혈 발생 위험 높여”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 ‘과로와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성’ 연구 결과 발표 (4. 30)
4. **3대비급여** : 8월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35% 줄어, 검사 50% → 30%, 마취 100% →50% ... 복지부, 선택진료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5. 1)
5. **기타** : 4대 중증질환, 부당청구, 약사/약국, DUR...

1. 보건의료정책

○ 로봇수술 비용 낮아지나? 복지부, 내년 급여화 가능성 시사 ... 국산화해야 비용 절감 (4. 14)

정영기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은 지난 11일 연세의대 1층 강당에서 열린 ‘로봇수술의 명암과 비전’ 토론회에서 “로봇수술에 대해 내년 또는 2016년에 선별급여를 포함해 건강보험에서 관리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의 발언은 정부가 지난해 6월에 내놓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의 연장 선상이다. 당시 정부는 비용·효과성이 낮더라도 국민 수요가 높으면 20~50%의 건강보험을 지원받는 ‘선별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선별급여 예시 항목에 로봇수술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로봇수술의 경우 선별급여가 아닌 전면 급여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정 팀장은 “대형병원의 비급여를 조사한 결과, 로봇수술 관련 진료비가 상위에 위치해 있다. 현재 추이를 봤을 때 로봇수술 진료비 규모는 더 빠르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로봇수술에 대한 기반연구를 진행하고 비용효과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건보공단, 담배소송 개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4. 1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오전 9시,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 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송비용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2003~2012년)의 건보공단 부담금을 산출했다.

○ **정부 지원 산부인과, 18개 시·군으로 확대 복지부 “응모지역 부족해 제공모 계획” (4. 14)**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분만의료취약지 지원 사업 모집 결과, 분만 산부인과 1개소와 외래 산부인과 6개소를 신규 선정하고,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선정된 분만 산부인과는 서귀포의료원(제주 서귀포시)이며, 외래 산부인과는 완도대성병원(전남 완도군), 한국병원(전남 진도군), 진안의료원(전북 진안군), 인애병원(강원 양구군), 삼성병원(강원 횡성권), 보은군손산부인과(충북 보은군) 등이다. 정부 지원 산부인과는 이로서 기존 지원지역 11개(분만9, 외래2)에서 총 18개 시·군으로 늘었다. 분만 산부인과로 선정되면 24시간 분만체계를 갖춘 거점산부인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등 12억50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이 지원되며, 외래 산부인과로 선정되면 산전진찰, 지역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 분만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비·운영비 등 2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받는다.

○ **위조·불량 의약품 제조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매출액 대비 최고 5% ... “올해 하반기부터 의약품 이슈 4가지 가시화될 것” (4. 14)**

위조 의약품 제조 업체에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하는 등 불량 의약품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다.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은 14일 오송 식약처에서 열린 정승 식약처장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관련 연구용역이 끝나 지난 3월22일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조·불량 의약품을 제조한 업체에 매출액 대비 최고 5%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던 제조·품질기준 위반에 1년 이하의 징역을 추가했다.

○ **인증원, 투약 오류 의료사고 예방지침 배포 (4. 14)**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4일, 병원 내 투약 오류로 인한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척추강 내 약물투여를 위한 지침’을 제정, 상급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전국의 의료기관에 이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일부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빈크리스틴 등의 항암제 투약 오류사고에 따른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인증원과 관련 기관들이 환자안전 및 약물 관련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시중유통 의약품 무작위 품질검사 6월부터 시행 위원회 15명 구성 완료 ... 이번주 첫 회의 ... “철저히 검증할 것” (4. 15)**

시중 유통 중인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무작위 수거검사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본격화된다. 여기에는 제네릭뿐 아니라, 오리지널도 포함된다. 식약처가 추진하는 제네릭 수거검사는 시중 유통 품목을 무작위로 선정해 생동성시험 및 비교용출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약효와 안전성 등이 허가 당시와 변함없는가를 검증하는 의약품 동등성 모니터링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최근 수거검사 시행방안을 정할 총 15명의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이번주에 1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위원회는 의료계 4명, 약계 4명, 소비자단체 및 관련 협회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 **심평원 ‘공공데이터 개방’ 주제 세미나 (4. 15)**

○ **의료취약계층 대상 ‘라이프태그’ 발급 안행부, 12월까지 세브란스병원 등록환자 시범운영 (4. 15)**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업단’ 출범식에서 응급상황에 의료취약계층을 효율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라이프태그’를 발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라이프태그는 소지자가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발견자와 소방대원이 스마트폰으로 응급 환자의 정보를 빠르게 파악해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팔찌형태의 휴대기기다. 이 기기를 활용하면 응급 환자의 생존 퇴원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환자안전법, 기존 법으로 대체 불가하나” (4. 16)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앞두고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환자안전법)’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법안’ 제정 관련 공청회에서 “(법 제정) 진행은 좋은 데, 단순 정보 교류만 부각되어 있다”며 “이 법에 의해 의료 질 관리가 잘 될까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중소병원은 질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환자안전 관련 정보를 환류한다고 해서 고칠 수가 없고, 고칠 수 없는 것을 병원 책임으로 묻게 되면 피해자를 나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런 형태의 법을 만들 때, 병원이 의료사고를 내지 않도록 하는 정부 지원책을 동시에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며 “지원책 없으면 중소병원 상황에서는 실효성 없이 병원과 정부간 갈등 관계만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소운 연세대학교 의료윤리학과 교수는 환자안전 측면에서의 법 제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존법에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겠으나, 중재가 목적이었던 법이기 때문에 환자 안전이라는 활동과 다를 수 있다”며 “정보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분석하고 환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안전사고 피해자인 故 정중현군 어머니 김영희씨는 “중현이를 오래 치료했던 전공의가 모든 사실을 얘기해줬기 때문에 진실을 알게 됐다. 내부 보고가 정말 중요하고, (내 사례가) 신호탄이 되어 (병원 환경이) 더 안전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환자안전법 제정에 힘쓰는 이유를 밝혔다.

○ 심평원 보유 진료정보 빅데이터 민간에 개방 (4. 16)

○ 식약처, 20개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불법 소지·유통 금지 ... 위반시 징역형 처벌 (4. 16)

제2차 의-정 합의로 2차 집단휴진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여진이 지속되면서 복지부가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정부가 원격의료법을 수정하지 않고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재추진을 논의키로 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2차 의-정 협의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간호인력개편협의체(간호인력개편TF) 불참 카드를 꺼냈다. 의협은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대의원 총회에 총파업 재진행 여부를 묻는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만약 이 안건이 대의원회에서 통과되면, 어렵게 봉합된 의-정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는 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와 관련한 2차 의-정 협의 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2차 의-정 협의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사자인 간호사를 배제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PA합법화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간호협회는 협의체 불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간협은 26일 “PA인력 대부분이 간호사임에도 당사자를 배제하고, 정부가 당사자도 아닌 조직(의협)과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합의를 했다”며 “정부와 의협의 협의결과 철회시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총파업 재추진 논의와 간호인력개편TF 무산 위기에 복지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 심평원 의료정보지원센터 개소식 무기한 연기 (4. 17)

○ 건협, 정부서울청사 건강캠페인 실시 (4. 17)

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건협)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1층 로비에서 다양한 건강관리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건강체험터를 운영했다. 정부서울청사 상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날 건강체험터는 건강관리분야와 금연지원분야로 나누어 운영됐으며 건강관리분야에서는 체성분, 스트레스 측정 및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모세혈관혈류 측정 등의 검사와 체력측정, 건강상담을 진행하였고, 금연지원분야에서는 체내 CO측정과 페나이 측정, 금연상담을 실시했다. 또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협에서 청사 내에 운영하고 있는 건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건강지원센터

터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 복지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심리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방안 마련 (4. 17)

보건당국이 16일 발생한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정신적 치료 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여객선 침몰사고 피해자 등에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사고 피해학생과 유가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 등을 관리하기 위해 심리지원팀을 구성했다. 심리지원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어제(16일) 오후 11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파견돼 구조된 학생 70여명을 대상으로 상담 등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오늘 오전 국립나주병원에서 구성된 심리지원팀을 진도 팽목항 현지에 파견해 현장에서 심리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으며, 국립서울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춘천병원에 심리지원팀을 추가로 구성해 필요시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를 지시했다.

○ “감기 자체엔 항생제 필요 없다” 식약처, ‘내 몸속 약 이야기’ 책자 발간 (4. 18)

○ 직장가입자 62% 1인 평균 건보료 25만원 추가 납부 (4. 18)

2013년도분 보험료에 대한 정산 결과 전체 직장가입자 1229만명 중 약 1000만명에 대해 1조 5894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작년 건보료 정산 결과 1229만명 중 761만명(61.9%)은 임금상승으로 1조9226억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238만명(19.4%)은 임금하락으로 3332억원을 돌려받게 된다고 밝혔다. 230만명(18.7%)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추가납부자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5만3000원이며, 소득감소자는 1인당 평균 14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230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전체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면 1인당 12만9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추가 및 환급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5:5로 부담하거나 돌려받는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전문병원 지정제 개편 ... 주산기전문병원 신설 질환수 11개 → 12개, 진료과목 9개 → 6개 (4. 21)

전문병원제도가 제2기(2015~2017년) 지정을 앞두고 일부 개편된다. 질환수는 11개에서 12개로, 진료과목은 9개에서 6개로 각각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늘(21일) 입법 및 행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문병원 내 일부 중첩이 발생하는 분야는 질환 중심으로 바뀐다. 현재 질환 11개·진료과목 9개로 지정돼 있는 것을 질환 12개·진료과목 6개로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진료과목 중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를 삭제했으며, 관절·척추·뇌혈관 질환으로 통합시켰다. 또 질환에 주산기(모자) 분야를 추가했다. 주산기(모자) 전문병원은 임신·출산·1세 이하 영아 환자를 통합·연속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케어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했다”고 주산기 분야 추가 배경을 설명했다.

질적 수준도 한층 강화했다. 복지부는 병상수, 인력 및 환자 구성, 진료량 등 기존 평가 기준에 재원일수·합병증 발생률 등 임상 질(質) 지표를 추가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지정요건에 포함시켰다. 또 의료인력 평가 적용기간을 공고일 기준 3월→6월로 확대해 우수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한 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력 평가 적용은 미리 예고한 질 평가와 달리 별도로 예고한 바 없어 1년을 검토했다가 6개월로 변경했다”며 “향후 3기 지정에서는 1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전국 요양병원 17.5% 의료기관 인증받아 (4. 21)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요양병원이 전국적으로 23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수준과 의료서비스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2010년부터 시행됐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 권익보호 및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인증을 획득한 요양병원은 기본가치·환자진료·성과관리체계·행정 및 지원 등 약 200여개 조사기준이 충족되었음을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공식 확인 받은 것이다. 4월 현재, 전체 1221개 요양병원 중 230개소(17.5%)가 인증을 획득하여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증받은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 “다른 개원의 고용 CT운용 합법” 법원 “건보공단, 요양급여 비용 환수 부당” (4. 21)

개원의가 다른 개원의를 고용해 CT장비를 운용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병수)는 최근 수원시 영통구에서 A정형외과의원을 운영 중인 공모씨(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모씨는 지난 2007년 7월 CT를 도입하고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김모씨를 비전속으로, 2008년 11월부터는 방사선과 전문의 이모씨를 비전속으로 근무하게 했다. 그러나 2008년 11월부터 근무한 이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B의원을 운영 중인 개원의였고, 건보공단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 공모씨에게 지급한 5000여만원의 급여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자는 타의료기관에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급여 환수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자 공모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수의료장비 운용 인력 기준에 비개원의여야만 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정당하게 이루어진 의료행위의 대가까지 전부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공모씨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공모씨의 이런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대로 CT 운용인력 기준이 전속 또는 비전속으로만 규정돼 있을 뿐 전문의가 비개원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비개원의보다 개원의가 진료를 병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판시했다. 환자를 최우선에 둔 판결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사실상 이씨가 공모씨의 병원에서 주 1회 정도 세부적 검토가 필요한 환자만 영상판독을 해왔을 뿐 진료를 주도적으로 행하지는 않아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와는 무관하게 공모씨가 CT영상을 보고 진료한 비용까지 (환수금액에) 모두 포함돼 있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 심평원 질병 통계정보, 즉시 확인 가능해져 (4. 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2일)부터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가 많은 질병 및 상위 100개 다빈도 질병 등에 대한 통계정보를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사전정보공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이번 정보공개는 최근 5년간(2009~2013년) 국민이 진료 받은 의과분야와 새롭게 추가한 한방분야 등 63억7000여 건의 진료내역에 대한 질병·행위별 통계 정보를 요양기관 종별, 지역별, 성별·연령별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 복지부, 치매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치매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 추진도 (4. 22)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 건립비를 주·야간 보호시설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치매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 시행예정인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5등급) 신설에 발맞춘 이 같은 추진계획을 밝혔다. 주·야간 보호시설은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가정이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림으로써 사회성과 정서적 교감을 증대시키는 한편,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완화시켜 치매노인에게 적합한 인프라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원되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를 주야간보호시설 우선으로 지원(금년 예산 50억원)하고, 주·야간 보호기관이 없는 인천 옹진군 등 11개 시·군·구에 건립비를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해 사회복지시설의 주·야간보호시설 병설운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그동안 재단법인에 한정되었던

신청 자격을 사단법인까지 확대하고, 종교단체,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해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을 독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주·야간 보호시설이 치매특별등급 대상자 약 5만명에게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 신의료기술 도입 빨라진다 복지부, 희귀질환 등에 신의료기술 제한적 허용 (4. 23)

대체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 필요성이 제기됐던 신의료기술 치료 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대체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의 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이전에도 일정 의료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자로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일부 부족해 탈락한 의료기술 중, 대체기술 없는 의료기술 또는 희귀질환 치료(검사)기술인 경우 의료기관 신청에 따라 심의를 통해 '제한적 의료기술'로 평가한다. 신청대상 기술은 당뇨병성 하지 허혈환자에 대한 줄기세포치료술 등 9개 의료기술. 제한적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의료기술로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치료를 받는 동안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별도 보험 가입비가 지원되며, 의료기관에는 제한적 의료기술의 치료 결과를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과 자료 입력비가 지원된다.

○ 튼튼병원 의료법 위반 혐의 128억 급여비 환수 치협 “기업형 사무장치과 법 적용 전환점 될 것” (4. 23)

검찰이 척추 전문병원 '튼튼병원'을 1인1개소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사실상의 사무장병원으로 규정하고 128억원의 급여비 환수조치를 내렸다. 이번 사례는 1인1개소 규정을 강화한 개정의료법이 발효된 지난 2012년 8월 2일 이후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첫 처벌이다. 병원의 실소유주뿐 아니라 고용된 의료인에게도 실질적 책임을 물었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지난해 11월 1000여명에 이르는 기업형 사무장치과 관련자를 검찰에 대거 고발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재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이번 처벌이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대한 법 적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 16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척추 수술용 의료기기 제조·판매 관련 리베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튼튼병원 실소유주가 네트워크 형태로 복수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의료법 1인1개소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서부지청은 튼튼병원 네트워크의 실제 소유자인 의료인 A씨와 B씨 및 고용의사 5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2012년 8월 이후 서울 강동구에 있는 튼튼병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의료인 이름으로 안산과 수원 등 총 3개의 튼튼병원 네트워크 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2년 9월 서울 강남소재 튼튼병원 외에 대구와 서울 등 모두 4개의 네트워크 병원을 개설·운영해 왔다. 서부지청은 1인1개소 의료법 위반 수사결과를 건보공단에 통보하고 진료비 환수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안산지사는 지난 16일 최종적으로 128억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했다.

치협은 “이번 검찰의 기소와 공단의 환수조치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개설했다라도 경영에만 관여하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지난 2003년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첫 사례로, 강화된 1인1개소법의 효과가 마침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치과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서울시, 건강취약계층 대상 결핵 이동검진 실시 (4. 24)

쪽방촌 거주자, 노숙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결핵 이동검진이 서울시에서 실시되고 있다. 대한결핵협회는 서울시와 함께 임시보호시설 및 거리 노숙인, 동자동 쪽방촌 등 5개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4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7일 용산구 일대 쪽방촌을 시작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결핵 발병률이 높은 노숙인 및 임시보호시설 거주자, 쪽방촌 거주자 등에 대한 결핵 이동검진을 집중 실시해 조기 발견 및 치료, 그리고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 **식약처, 불량 식품업체들 무더기 철폐 (4. 2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품들에 대해 무더기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24일 식품제조·가공업체 ‘어업회사법인 여수새고막(주)(전남 여주시)’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제조·판매한 ‘아리찬 새고막(수산물가공품, 제조일자 : ‘13.12.1~‘14.4.22.)’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2. 보건의료산업/기술

○ **성균관대, 두번째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개설 복지부·진흥원, 성균관대에 2017년까지 4년간 약 20억원 지원 (4. 12)**

○ **의료기기조합, 한국관 구성 CMEF 참가 (4. 18)**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17~20일 중국 심천 국제전시회장에서 열리는 ‘제71회 중국국제의료기기 춘계전시회(CMEF)’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했다.

○ **미래기술연구원 ‘차세대 스마트 센서 및 융합 기술’ 세미나 (4. 21)**

바이오 의료 분야의 차세대 스마트센서 융합기술을 짚어보는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미래기술연구원은 25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50분까지 여의도 금융투자연구원 801호에서 ‘차세대 스마트 센서 및 융합 기술 세미나 III - 바이오 의료 분야’를 진행한다. 1일 교육비는 29만7000원이다.

○ **진흥원, 몽골 의사들에게 국내 의료지식 전수 (4. 23)**

몽골 의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지식과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한-몽 서울 연수 프로젝트 3차년도 사업이 시작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2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복지부와 몽골 정부 관계자, 사업참여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한-몽 서울 프로젝트’ 입교식을 열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수생들은 총 26명으로 오는 7월 21일까지 3개월 동안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참여 국내 의료기관은 대전선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의료원, 수원주석병원, 남양주현대병원, 원광대학교병원 등 6개 기관이다.

3. 제약업계

○ **이경호 제약협회장, 제약 정책 대정부 건의 (4. 14)**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이 16일 열리는 보건의료제도 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국내 제약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를 짚고, 관련 정책에 대해 대정부 건의를 할 예정이다.

○ **“건축법 개정 이전 용도 특한 도매업체 의약품 지속판매” 협회, 건축법시행령 관련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4. 15)**

국토부는 “일부 개정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 제 3호 가목에 의하면 의약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제곱미터(302.5평) 미만은 1종 근린생활 시설로 구분하고, 제 7호 다목에 의하면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판매시설로 분류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또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적법하게 2종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를 특한 경우는 1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되므로 별도 용도변경 없이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일반의약품 시장 먹구름 ... 최근 5년 매출 분석 우루사, 아로나민, 삐콤C 등 주요 품목 줄줄이 하락 ... 마켓 건기식 영향 (4. 15)

○ 저가약 정책에 국내 출시 포기 신약 속출 비교대상 약제 가격 워낙 낮아 ... 해외 약가에도 악영향 ... 신약개발 의욕 꺾어 (4. 16)

“글로벌 본사는 한국을 환자 건강에 무관심한 국가로 보고 있다.”(다국적 제약사 임원)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에서 책정된 저렴한 보험약가가 주변국의 약가형성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한 제약사들이 국내 제품 공급을 포기하고 있다. 안센은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SGLT-2 억제제라는 새로운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인보카나’의 시판승인을 받았으나, 보험급여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급여 출시 역시 보류했다. 다수의 당뇨병 치료제가 존재하는 한국의 시장상황 및 환자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안센의 공식적인 설명이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글로벌에 비해 턱없이 낮은 약가를 받게 될까봐 우려해서라고 추측하고 있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C형간염의 경우에도 완치율 90%의 신약들이 개발됐으나 척박한 국내 보험약가 상황 때문에 국내 공급을 망설이고 있다.

약가협상에서 번번이 실패했던 대장암 치료제 ‘얼비투스’와 ‘아바스틴’은 허가 후 거의 10년 만인 지난 3월에서야 급여등재됐다. 대장암 치료를 위한 표적항암제의 급여등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 역시 월 600만원 상당의 고가 항암제지만, 2009년 허가 이후 5년 만인 지난 3월에야 급여가 적용됐다. 그것도 허가사항과 달리 ‘벨케이드’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에게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업계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대상 약제군의 가격 자체가 워낙 낮다는 사실이다. 외국은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2배 수준에서 우월성을 인정받아 얻는 보상과 반토막된 우리나라 가격과 비교해 얻어지는 보상은 완전히 다르다”며 “이런 문제로 공급이 지연되면 그 약제가 꼭 필요한 소수 환자들에게 공급이 안돼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답답해 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에서는 한국이 국민건강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약가가 낮은 건 둘째 치더라도, 꼭 필요한 항암제의 급여등제도 몇 년 만에 성사되기 때문이다. 환자 식대 2000~3000원을 급여지원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죽어가는 암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제를 제공하는 게 훨씬 옳다”고 강조했다. C제약사 관계자는 “신약개발 제약사에 좋은 약가를 줘야 동기부여가 돼 다시 신약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데 저렴하게 책정한 후 계속 약가를 인하하면 누가 신약개발을 하겠는가”라며 “정부는 신약개발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오히려 산업을 저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제약협회, 정부에 규제개혁 과제 43건 건의 (4. 16)

○ 약사회, 전국여약사대회 무기한 연기 (4. 17)

○ 진흥원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4. 18)

○ 제약협회, 세월호 실종자 가족에 의약품 긴급 지원 (4. 21)

○ 저가구매 인센티브, 총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개편 복지부, 입법예고 ... 실거래가 상시 확인시 의약품 공급자료도 활용 (4. 22)

현행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총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및 관련 4개의 고시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6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의 70%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던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되며, 저가구매 인센티브 관련 조항은 삭

제된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요양기관의 저가구매노력뿐 아니라 처방약 품목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에 대한 노력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반기별로 요양기관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저가구매 노력이 큰 요양기관이라도 처방 약품비가 높은 경우에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같은 저가구매액에 대해서도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해 지급받게 된다. 또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 밖에 이번 입법예고안은 건강보험 의약품의 실거래가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제약회사·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의 공급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거래가 조사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약제 실거래가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 공급업자와 요양기관의 의약품 공급금액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라 의약품 공급가격과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비교해 10%범위 내에서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혁신형 제약 인증기업'의 의약품에 대해서만 인하금액의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규정의 세부기준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3.25~5.24) 됨에 따라 종전의 약가인하 규정은 삭제됐다.

○ “장려금제 환영 … 저가구매 재현 가능성은 우려” (4. 22)

한국제약협회가 총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도입과 관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여전히 강압적인 저가구매 폐단이 재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제약협회는 “정부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해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협의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한 결론을 반영하는데 있어 충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가구매를 통해 약품비를 절감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신설 제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부정적인 요인을 완전히 거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협회는 “걱정을 거둘 수 없다”며 “여전히 강압적 저가구매 폐단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급여증지는 시장 퇴출 … 리베이트 그만뒀다” 이경호 제약협회장, ‘약제 급여증지·삭제법 시행과 제약산업의 환경변화’ 설명회서 강조 (4. 23)

이 회장은 “보험급여 증지 및 삭제 조치는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며 “여기에는 리베이트가 의약계 고질적 병폐라는 국민의 시각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척결하고 말겠다는 국회와 정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몇몇 제약사가 망하더라도 리베이트 문제만은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7월 이전에 리베이트로 의심받을 수 있는 모든 영업마케팅 행위를 폐기하고, 투명하고 정상적인 판매망을 새로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 가장 강력한 리베이트 규제 도입 전초전 “리베이트 투아웃제, 쌍벌제 능가” … 경쟁업체 감시 강화 … “법리적 허점 많아 행정소송시 승소 가능성도” (4. 24)

제약업계 및 법조계는 리베이트로 두 번 적발된 약제를 급여목록에서 퇴출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쌍벌제를 능가하는 가장 강력한 리베이트 규제가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 적발 약제를 1년의 범위내에서 급여정지하고, 이 약제가 또 다시 정지될 경우 총 정지기간, 위반정도를 고려해 급여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복지부는 일반 약제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제를 구분해 처벌기준을 나눴는데, 일반 약제는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정지기간이 분류된다. 예를 들어, 제약사가 1억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1년간 급여가 정지되고 재적발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이석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3일 한국제약협회에서 열린 제도설명회에서 “급여증지는 해당품목에 대한 사형선고를 의미하고, 제약사 판매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의약품 시장에는 쌍벌제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의 영향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뿐 아니라 경쟁업체 판매약제의 급여증지는 자사의 영업망 증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경쟁업체에 대한 감시 강화 및 내부고발의 활성화를 유도

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불합리하고, 여러 제반사항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동일한 리베이트 행위라도 전년도 급여비용 총액에 따라 수십~수백 배 차이가 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법률 자체에 대한 쟁송은 어렵겠지만, 해당 약제의 급여정지 및 제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는 가능하다”며 “승소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또 그 쟁송 과정에서 개정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통해 다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4. 의업단체

○ 의협, 사원총회 개최 5월 이후로 미뤄 (4. 12)

○ 의협 “제값 받을 때까지 1회용 포셉 사용 중단” “2만3000원짜리 사용, 8620원 지급 … 저질의료 강요” (4. 14)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회용 내시경 포셉(가위)’ 사용을 중지할 것을 소화기내시경학회에 요청했다. 의협은 14일, 학회에 공문을 보내 “최근 공중과 방송에 보도된 일회용 내시경 포셉 재사용 문제는 건강보험제도의 강압적 횡포 때문”이라며 “정부가 정당한 비용을 보전해 줄때까지 일회용 포셉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9일 한 공중과방송이 내시경을 이용한 생검 시술 시 1회만 사용해야 하는 내시경 포셉을 재사용함으로써 감염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생검이란 질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 내부에서 체액이나 조직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1회용 내시경 포셉을 재사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데다, 환자로 부터 비용을 직접 받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생검(질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 내부에서 체액이나 조직을 채취하는 행위)시술 보험수가는 8620원으로 1회용 내시경 포셉 가격 2만3000원의 절반도 안된다. 시술할수록 의료기관은 손해를 입는 셈이다. 환자로 부터 1회용 내시경 포셉의 비용을 직접 받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은 1회용 내시경 포셉을 재사용하거나, 손해를 감수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정부가 의사들에게 저질의료를 강요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회원과 환자들에게 주지시켜 비정상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 “대의원회 의장이 의협 대정부 투쟁 끊임없이 방해” 노환규, 정관 개정 필요성 역설 … “변영우 의장 횡포 속수무책” (4. 14)

"대한의사협회의 주인은 대의원이 아니라 회원들입니다. 협회의 가장 큰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대의원회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대의원회를 향해 연일 날선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번에는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을 직접 겨냥했다. 대의원회 의장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회원들의 뜻이 왜곡되고 일관되고 힘 있는 회무집행을 근본부터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사들이 잘못된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는 작금의 현실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관치주의 횡포 때문이지만,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지한 횡포를 방치한 것은 다름 아닌 대한의사협회 회원 자신”이라고 개탄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의원 선출 구조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노 회장의 판단이다. 242명의 대의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발되지 않고 대다수가 직역 혹은 지역의사회에서 소수의 합의 하에 대의원으로 지명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 대의원들은 자신을 의협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실제 주인인 회원들을 폄훼하고 있다는 것. 노 회장은 “37대 의협 집행부가 회원총회를 통한 정관변경을 서두르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무엇보다 대의원회 의장의 권한 축소 필요성을 역설했다.

○ **원격의료 저지 및 간호법 개선 위한 촛불집회 열린다** 간협, '전국 간호사·간호대학생 결의대회' 개최 ... **보건의료 4개 단체와 연계 (4. 16)**

원격의료도입 저지 및 의·정합의 철회와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법 및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오는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DDP)에서 열린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오는 29일 저녁 7시 DDP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동참한 가운데 '전국 간호사·간호대학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집회에는 약 1만여명의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 **자중지란 의협 ... 한치 앞도 안보인다 집행부 vs 대의원회·시도의사회장 갈등 ... 법적대응 등 폭풍전야 예고 (4. 17)**

○ **전국 간호사·간호대생 결의대회 잠정 연기** 간협 "세월호 침몰사건 실종자 무사귀환 기원" (4. 18)

○ **[속보] 노환규 의협회장 탄핵안 통과 (4. 19)**

○ **전의총, 의사협회 정관 개정 서명운동 돌입** 오후 3시 720여명 참여 ... "대의원 개혁 열망 간과해서는 안돼" (4. 21)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대의원 개혁을 열망하는 회원 요청서'를 배포하며 대한의사협회 정관 개정을 위한 청원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전의총은 19일 의협 대의원회로부터 탄핵(불신임)을 받은 노환규 전 회장이 대표로 있었던 임의단체이다. 전의총은 21일부터 온라인 서명을 진행중이며 오후 3시 현재 720명이 참여한 상태다. 서명은 전의총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 이름, 면허번호, 소속병원만 기입하면 된다.

○ **"보라매병원 임신부 해고 간호사 원직복직 합의" (4. 21)**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노동조합)는 지난해 12월1일자로 해고된 임신부 비정규직 간호사에 대해 5월 1일자로 원직복직하기로 지난 18일 병원측과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2014년5월1일자로, 보라매병원 수술실로 원직복직한다는 것과 신규채용으로 하되 고용보장에 노력한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과 연대 조직들은 무기계약 전환 3개월을 앞두고, 2013년12월1일자로 해고된 임신부 비정규직 해고 간호사의 복직을 위해 5개월간 병원, 서울시청, 여성가족부 앞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 집회 등의 투쟁을 진행해 왔다. 노조측은 "임신한 여성 노동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병원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단체협약도 적용하지 않는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투쟁과정에서 드러났다"며 "하청에서 해고된 노동자는 아직 복직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연대투쟁으로 반드시 복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병협, 세월호 침몰 사고에 긴급의료구호 요청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공문 발송 ... 의료봉사 회원 병원 모집 (4. 21)**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들의 건강상태 우려에 따른 긴급의료구호에 나섰다. 병협은 21일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긴급 협조 공문을 보내 실종자가족들에 대한 의료봉사 동참 회원 병원 모집에 나섰다. 현지 진도종합체육관 임시진료소에서는 경찰병원, 명지병원, 목포한국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등이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긴급 의료 봉사활동을 펴고 있으며, 세브란스병원은 17일부터 19일까지 의료구호활동을 전개했다. 새로 꾸려지는 각 병원단위 진료봉사단은 현지 진료팀을 교대, 진료활동을 펼치며 갈수록 심해지는 학부모 등의 정신적 외상 등에 대한 치료 및 상담을 맡게 된다.

○ **간협, 세월호 침몰 피해자 및 유가족 정신건강 상담 '통합재난심리지원단' 참여 통해 지원 ... 물품지원도 계획 (4. 22)**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보건복지부, 안정행정부 등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긴급 구성, 가동에 들어간 '통합재난심리지원단(심리지원단)' 참여를 통해 세월호 여객선 참사로 발생한 피해자 및 유가족, 지역사회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에 나선다. 간협은 심리지원단에서 생존자, 유가족,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신전문간호사와 정신보건간호사 등 정신전문 인력과 심리상담사,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간협은 이를 위해 안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마련된 심리지원단 사무국과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세월호 침몰사고 자원봉사 전문인력폴센터'를 구축해 가동에 들어갔으며 심리지원단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지원도 나설 계획이다.

○ **보건의료노조 "이런 상황에서 의료영리화 강행이라니" (4. 23)**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 관련 의료법 시행령 규칙개정(안)'을 위한 실무회의를 추진중이다. 회의는 24일 오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7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실무회의에는 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제도개선팀장, 담당 사무관이 참석한다. 의약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지역 단체의 각 담당이사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은 편의점·장례식장·주차장과 같은 환자편의를 위한 부대사업뿐 아니라 의료기기·의약품·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 운동시설, 여행업·건물임대업·호텔숙박업·해외환자유치업 등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은 영리자본이 환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서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의료기관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허용 등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료영리화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부대사업 확대를 국회에서 법개정없이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행정력만으로 처리하려는 꼼수를 부리려 하고 있다"며 "24일 회의를 폐기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2014 서울대병원 병원의료정책 춘계 심포지엄 개최 (4. 22)**

서울대학병원은 오는 5월 12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대학병원의 과제'를 주제로 병원의료정책 춘계 심포지엄을 서울대학교병원 내 소아 임상 제1강의실에서 개최한다. 최근 정부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인턴제 폐지 등 의사양성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것이다. 심포지엄에서는 수련제도 개선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대학병원으로서 교육·수련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수련병원 현황과 수련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향 및 해외 의료 인력 양성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고, 대학병원이 수련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들을 도출할 예정이다.

○ **"회무공백 최소화하고 의료계 현안 대응" 김경수 의협 회장 직무대행, 서신문 배포 ... "총파업 참여 피해 없도록 할 것" (4. 23)**

"회무공백을 최소화 하고, 직면한 의료계 현안에 대응하는 등 차기 회장이 회무를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 김경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대회원 서신문을 배포하며 직무대행 기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발의중인 일부 의료약법을 원천 봉쇄해 잘못된 의료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의정협의 결과를 성실히 이행해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대행체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협의 모든 임직원과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의협, 상근임원 7명 상여금 과다 지급” 감사단, 회무·회계 감사보고서 통해 지적 ... "모바일 회원투표 공정성 확보 필요" (4. 24)

○ “건보공단·심평원, 국민 보험료로 임직원 사보험 잔치 “전의총,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심평원, 직원 배우자까지 혜택” (4. 24)

우리나라의 양대 공보험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수십억원을 임직원들의 민간보험 가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한 의사단체가 오늘(24일) 오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 명목으로 국민들로부터 징수한 건강보험료를 암질환 등의 민간보험 가입에 사용한 이들 2개 단체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경우 지난 2008년 3억7000만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보험료가 늘어 올들어서는 33억원을 임직원들의 민간보험 가입비로 사용했다. 몇 년 사이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심평원은 2008년 2억7000만원에서 2014년 6억4000만원으로 2.4배 늘었다. 전의총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직원들에게 과다하게 지원되는 사보험료를 절약하면 건강보험제정의 존재의 이유이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일반국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상승할 것은 자명하다”며 “보건당국과 감사원은 이제라도 사보험 잔치를 벌인 국가 공보험 운영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척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노환규 최측근 법제이사·기획이사 불신임 발의 의협 대의원 90명, 불신임 동의서 제출 ... 27일 정총서 판가름 (4. 25)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최측근인 상임이사 2명에 대한 불신임이 발의돼 의협 내분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25일 임병석 법제이사와 방상혁 기획이사에 대한 불신임 발의를 공고했다. 대의원회는 “이들 상임이사들은 정관 제20조의 2(임원에 대한 불신임)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위반했다”며 “정대의원 90명이 불신임 동의서를 제출하고 불신임 발의를 요청했으므로 불신임 발의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정관에 따르면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 대의원(242명) 3분의 1이상(81명)의 발의로 성립된다. 임명된 임원에 대한 불신임이 발의되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은 즉시 정지된다

5. 질병/기타

○ 눈 뻑뻑한 ‘안구건조증’ 여성이 남성보다 2.2배 취약 장기간 콘택트렌즈 사용, 과도한 눈 화장 등 원인 (4. 15)

○ 초기 감별 어려운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 치매 구분 정용안·송인욱 교수팀 연구결과 ... "뇌 혈류량 변화 관찰하면 구별할 수 있어" (4. 18)

초기 증상이 비슷한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 치매의 감별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용안·송인욱 교수팀은 최근 뇌의 혈류량 변화를 관찰하면 두 질환을 조기에 구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이번 연구결과는 질병 초기 증상이 비슷해서 진단에 혼선이 있었던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 치매를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어 치료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 “폐암 환자 10명 중 8.5명, 흡연 노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연구 결과 ... 직접흡연 74.4%, 간접흡연 10.8% (4. 18)

폐암 환자 10명 중 8.5명이 흡연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PET-CT(양전자방출

단층촬영기)를 촬영한 폐암환자 696명을 대상으로 흡연과 폐암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85%가 넘는 폐암 환자들이 직접 또는 간접 흡연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는 지난 2011년 7월 개원 이후 올해 2월 말경까지 PET-CT 시행을 통해 696명에게 폐암 판정을 내렸는데, 이 중 74.4%(518명)가 직접 흡연자였으며, 간접흡연자(가족 또는 직장에서 흡연에 오랜시간 노출된 경우)는 10.8%(75명)였다. 반면, 직-간접흡연 경험이 전혀 없는 환자는 14.8%(103명)에 불과했다.

○ **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올해 첫 번째 일본뇌염 매개모기 부산서 확인 (4. 21)**

○ **건강과대안 ‘스페인 의료총파업’ 주제 학술대회 (4. 21)**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건강정책포럼(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은 5월16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1층 동백홀에서 오후3시부터 1시간 20분동안 ‘의료민영화에 맞선 스페인 의료총파업의 전개와 함의’를 주제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2014 봄 학술대회 개별세션’을 진행한다.

○ **“게임 중독 자가진단법 엉터리” 건대병원 하지현 교수 “IAT 점수, 인터넷 접속시간 · 임상적 중증도와 무관” (4. 21)**

국내 연구 결과,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법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IAT(Young’s Internet Addiction Test)가 실제 인터넷 중독 여부와 정도를 진단하는데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하지현 교수는 인터넷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 ‘영의 인터넷 중독 테스트의 유용성(Usefulness of Young’s Internet Addiction Test for Clinical populations)’을 통해 IAT 점수가 인터넷 중독자의 일평균 인터넷 접속시간이나 임상적 중증도와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밝혔다.